

警察 首腦部 대대적 人事

- 搜查權 調整, 集·示文化 정착 등 현안문제 개혁 박차 -

최근 이택순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치안정감으로부터 총경까지의 승진 및 전보인사가 대대적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경찰청은 본격적인 이택순 청장 체제의 가동과 더불어 조직안정을 추스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한편 경찰 수사권 조정문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문화 대책 등 당면현안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단행된 경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 이 청장은 『과도한 발탁인사는 없을 것이며, 조직 서열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조직 안정성과 합리성을 인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임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단행된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치안정감 인사는 48년생인 강영규 대학장이 용퇴한 가운데, 경찰청 차장에 한강택(55, 전남, 간부후보 25기) 전남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한진호(57, 인천, 간부후보 24기)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경찰청장에 이창수(51, 경남, 간부후보 28기) 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에 송인동(50, 충남, 행시 24회) 울산경찰청장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또한 지난 15일 단행된 치안감급 인사에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에 정봉체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10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가운데, 11명의 치안감이 전보됐다.

이번 치안감 승진자 10명의 지역 분포는 경기 2

한편 고시출신은 경찰대 출신이면서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한 박종준 경찰청 혁신기획과장(2기), 박상용(사법고시 26회) 경찰청 형사과장, 김용관(행정고시 30회) 서울 성동경찰서장 등 3명인 가운데 박종준 과장은 지난해 승진한 윤재욱 경무관(17기)에 이어 경찰대 출신 2호 경무관을 기록하게 됐다.

경찰청은 경무관 인사와 관련 『업무실적, 혁신추진성과와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을 엄격히 검증했다』며 『그동안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경기·강원 경찰청 소속도 1명씩 선발,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위직 인사는 지나치게 지역안배에 치중한 결과, 업무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배제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경무관 승진 인사는 연공서열과 도덕적 검증, 직능별 안배의 고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였다는 관측도 있다.

대상자 가운데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고참인 97년 총경 손모 등이 배제되고, 98년과 99년 총경 승진자 중에서만 각 7명씩 승진되었으며, 전체 14명중 유력한 경쟁자들이 즐비했던 직능들에는 한 명씩만 배정한 반면 생활안전기능에만 두명을 배정한 것도 다소 의외란 시각이 있다.

한편 총경급은 66명이 승진한 가운데 315명의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총경 승진자는 서



이택순 청장이 치안정감급 보직신고를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속에 일부 「뜻밖의 결과」란 시각도 나머지 인사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명, 광주·전남 3명, 대구·경북 3명, 부산·경남 1명, 충남 1명 등인 가운데, 서울청장과 경기청장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방청장이 모두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번 치안감 인사를 두고 『업무추진 실적, 혁신성과 및 전문성을 반영하고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인사를 대폭 선발했다』며 『지휘부 공백에 따른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수사권 조정, 평화적 집시문화 정착 등 현안사항 추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무관급 인사는 지난 20일 14명이 승진한 가운데 33명의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청 최광화 홍보관리관이 경찰대 교수부장으로 승진, 발령나는 등 경찰청 소속 총경 7명, 서울경찰청 5명, 경기경찰청 1명, 강원경찰청 1명이 승진된 가운데, 출신 지역별로는 경남 4명, 경북 2명, 전남 2명, 충남 2명이고 서울·경기·강원·전북이 각각 1명이다.

울경찰청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14명, 부산경찰청 5명, 경기와 전남경찰청 각각 4명 등이다.

특히 이번 총경 인사에서는 1996년 경정 승진자가 총경으로 승진 발령되는 등 연공서열을 무었보다 중시했다는 평인 가운데, 전남경찰청 한재숙 생활안전계장은 유일한 여성 승진자로 지난 1998년 김강자 전 총경이 여경 출신 첫 총경이 된 이래 6호 총경이 됐다.

경찰청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하고 업무실적과 경력을 반영해 승진자를 선발했다』며 『경사 이하 입직자의 고위직 확대를 위해 전체 총경 승진자의 25.8%인 17명을 순경 출신에 배정해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과 비교할 때 크게 우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방선거와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나머지 하위직 인사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되고 있다

- 평택 미군기지반대 집회 바람직한 시위문화 시금석으로 평가 -

지난 해 12월 농민단체 시위자의 사망 이후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이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택 대추분교에서 개최된 「미군기지 이전반대 제3차 범국민대회(3천여명 참석)」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일체 불법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시위문화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시위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고조된 시기에, 미군부대 주변에서 개

최된 첫 대규모 집회로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경찰청은 이번 집회와 관련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최측의 자율적 집회관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집회현장 전면에 근무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집회 및 행진 전과정에 폴리스라인 침범, 미시절 철조망 훼손 등 일체의 불법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경찰청 인권수호위·전의

경 부모 모임 등 외부 인권단체에서도 집회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투명

한 집회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번 집회는 시위문화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면서 『이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인권수호위·전의경 부모 모임에서 현장을 참관하는 등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으며, 이번 사례를 집회시위에 관한 평화적 관리의 모델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시위문화 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한 이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경찰청은 시위 관련 법령과 제도 및 경찰장비를 개선하고, 시위현장에는 교통복이나 근무복 위주의 경찰관으로 대비하되, 특히 평화적 시위에는 폴리스 라인만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찰관 상설부대의 창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차장 직속인 '집회시위현장 인권수호위원회'를 활용해 상시적인 현장감시 활동을 벌이고, 경찰조직과는 별도의 '시민감시단'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나해 농민사망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지금의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성숙된 시민의식과 어울어져 큰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년차 경장 순직시 유족연금 매월 100만원

순직 공무원보상법 제정, 유족보상 현실화 길 열려

경찰관 등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와 교통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 유족보상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

률안(이하 순직보상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순직경찰관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현행 보수월액의 35/100에서 65/100로 인상되고,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20년 미만의 경우도 보수월액의 55/100을 지급받게 되었다. 예컨대 근무한지 15년이 된 경장이 순직할 경우 유족연금이 현재는 전혀 지급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유족보상금은 경찰관의 대테러작전, 범인체포, 경비 경호 등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60배인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직무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이제 마음놓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2004년의 경우 범인과 싸우다가 3명, 교통단속을 하다가 3명, 고속도로 사고처리 등 위험을 방지하다 2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많은 경찰관들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실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고작해야 5~6천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7일 수원에서 음주차량에 1km 이상을 끌려가 현장에서 테러자전, 범인체포, 경비 경호 등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5천5백만원, 2월 7일 강원도 홍천에서 교통사고처리 중 차량에 치여 순직하고 윤주열 경장은 고작 6천9백만원이었으며 연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 보다도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번 순직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전 경찰관은 경찰의 노고와 근무여건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깊이 새겨 민생치안에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순직보상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불의의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004년 8월 경찰관 피살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열악한 순직 공상의 보상 문제가 부각된 이후 순해전보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월 4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 공상경찰관의 치료 요양비 전액을 보전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6월 23일에는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경찰관도 일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순직 공상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약 2억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근속승진 연한 단축 3월부터 시행

경사 8년이면 경위, 경사·경장도 1년 단축



경찰공무원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이택순 청장과 일선 경찰관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2월

27일 경찰의 근속 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3월부터 그대로 시행기로 함에 따라 경사가 8년만 근속하면 경위로 자동승진(근속승진)하게 되고, 경사·경장 승진 연한도 1년

씩 단축되게 되었다.

청와대는 작년 말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자, '소방공무원 등과 형평성 문제와 예산 문제를 들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했고, 이해찬 총리도 "불합리한 법이 의원 입법됐다"며 반대 의견을

보여 왔었다. 이후 청와대는 2월 중 법 재개정을 지시했고, 열린우리당도 당대회에서 재개정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7일 국회 행사위에서 『승진 연한 단축은 어렵다』고 했던 행자부가 입장을 바꿔 여당의 단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개정문제는 하위직 경찰관들이 중심이 되어 무궁화 클럽을 결성하고,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래, 정부의 재개정안 제출에 일부 경찰관들이 반발해 헌법 소원을 내는 등 조직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었다.

3월 경위 승진 대상자는 3770여명이며, 올 한 해 전체 경장~경위 승진 대상자는 2만여명에 달한다.

경우신문 원고모집 : 02-2234-1881

「국민생활안전확보」를 「수사구조개혁」 발표으로(1면에 이어)

신뢰도, 청렴도 조사

▷동아일보·21세기 평화재단 조사(‘06.1.10, 1,200명 대상)

-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 변화' 조사에서 정부조직, 기업 등 17개 집단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경찰이 7위로 정부조직 중 최고 순위를 차지, 사법부(10위) 보다 높은 신뢰도를 기록함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한국리서치 조사(‘05.6.10~13, 2,000명 대상)

- 우리사회 13개 주요분야 청렴도에서 경찰은 7위(10점 만점중 4.9점, 전체 평균은 5.0)로, 공직분야 중에서는 최고순위를 차지

- 검찰은 12위(4.6점)로 꼴찌인 정치인(2.4점)에 이어 취하위 평가

▷한국경제신문·글로벌 리서치 조사(‘05.4.21, 1,016명 대상)

-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각 분야 국가만족도에 서 치안·법법분야가 51.3점으로 최고점을 기록(100점 만점, 각 분야 평균 36점)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 조사(‘05.4.11~13, 전국 1,619명 대상)

- 조사대상 23개 기관 중 경찰이 전체 신뢰도 7위로 국가기관으로서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이어 3위 차지(경찰은 전체 신뢰도 9위)

“경찰수사권 독립” 조사

▷월드리서치, 국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05.8.19)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찬성 : 79.4%

▷한나라당, 국민 2,472명 대상 여론조사(‘05.6.15)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찬성 : 69%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05.12)

- 찬성비율 : 연합뉴스 96.6%, 서울신문 95.5%, MBC 88%, Yahoo 75%, Paran 74.7%, NAVER 66.7%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05.4~8)

- 찬성비율 : 국민일보 86.3%, 세계일보 96.2%, 법률신문 70%, SBS 85.1%, DAUM 79%, Yahoo 77.8%, NAVER 70%

제 1회 경찰병원 열린 문화강좌 실시

- 문화재와의 만남-

경찰병원이 열린 문화강좌 실시를 통하여 시간적·공간적·경제적 제한으로 인하여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게 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경찰병원장

- 다 음 -

- 일 시 : 3. 11(토) 오후 3시,
- 장 소 : 본원 2층 대회의실
- 내 용 : “문화재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진행될 행사에서는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인 유마리 강사를 초빙하여 불교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 병원 이용객, 병원 직원 등 누구에게나 문화적 교양 함양 기회를 제공할 예정